

돼지고기 12년만에 수입 재개

- 정부, 육가공용·보세가공용 돼지고기 수입 허용

그동안 수입이 중단되었던 수출유망품목인 돼지고기가 12년만에 수입이 허용돼 양돈농가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지난 5월 25일 최근 국내 돼지값이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돼지고기 수출량이 격감하고, 또 육가공제품의 수요는 크게 신장하고 있으나, 원료육의 부족과 가격상승으로 육가공품 생산·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돼지고기 수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육가공원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돼지고기 수출업체중 희망업체에 대해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축협중앙회의 수입추천으로 2개월전 수출물량만큼 수입 가능

수입추천물량은 돼지고기 수출업체의 2개월전 수출 실적에 상응하는 물량으로 정하고, 축협중앙회로부터 수입추천을 받은후 2개월내에 수입을 하지 않으면 그 물량은 재추천을 해주지 않는다. 수입한 돼지고기는 육가공 원료육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며, 만약 수입돼지고기를 시중에 유통하거나 타용도로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입추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돼지고기 수출업체로서 육가공업을 영위하지 않는 업체의 수입물량은 육가공업체로 하여금 수입하게

하거나, 직접 수입후 육가공업체에 납품해야 한다.

14만원대로 가격 떨어지면 수입 중단 방침

그러나 농림수산부는 돼지고기 수입을 금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되, 그 이전이라도 국내 돼지 가격이 14만원(90kg 기준) 수준에 도달할 경우엔 수입을 중단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수산부는 이에앞선 지난 5월 20일 최근 돼지값 상승으로 대일돈육수출이 크게 달려 애써 개척한 수출시장을 상실할 위기를 맞고 있다고 판단, 보세가공용 돼지육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일본에 대한 지속적인 돼지고기 수출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선 외국산 지육을 수입한 후 보세구역에서 가공, 전량 수출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대성식품에서 신청한 캐나다산 돼지 지육의 보세가공사업을 승인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많은 양돈농가들은 우리나라의 양돈산업이 선진국 수준으로 비약적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육가공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도, 정부의 이번 조치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을 하고 있다.

수출하기 위해 수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제도개선으로 수출업체 지원해야

즉 정부가 일본에 대한 수출시장관리 측면에서 돼지고기 수입을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외국인 돼지고기를 수입한다는 그 자체가 수출정책과 모순될 뿐더러, 이번 기회를 계기로 수출정책에서 수입정책으로 슬그머니 정부 정책방향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가 진정 돼지고기를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의지가 있다면 수출물량 만큼 수입을 허용해 수출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외국에 비해 훨씬 불리한 조건들, 즉 관세환급과 부가세 영세율 적용, 도축세 면제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해 수출을 늘려야 할 것이다.

또한 소시지, 돈육통조림 등 육가공제품의 수입을 개방한 상태에서 새삼스레 국내육가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돼지고기 원료육을 수입한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가격이 외국에 비해 비쌀 수밖에 없는 것은 양돈농가들의 생산성이 낮아서라기 보다 양돈원자재(사료, 약품, 기자재)에 대한 과중한 관세·부가세 부과, 비싼 국내산 옥수수·대두박의 의무사용으로 인한 사료가격 인상 등 그 원인이 주로 불합리한 제도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수입쿼터 이권화, 저질 수입돼지고기 시중유통 우려

이번 정부의 돼지고기 수입 허용 조치는 일단 외국에 돼지고기 수출시장 문을 열어줬다는데 큰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돈육수출업체의 수입쿼터 자체가 이권화 되는 부조리와 저질 수입돼지고기의 시중유통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특히 정부가 수입돼지고기를 시중에 유통할 경우의 제재 조치도 겨우 수입추천대상에서 제외키로 함으로

써, 이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작년도와 같이 돼지가격이 생산비를 훨씬 못 미칠때는 뒷집만 지고 있다가 1년간 32%인 8만여 양돈농가가 도산한 가운데 겨우 회복된 돼지가격을 보고 물가상승의 주범인양 수입개방, 수출의무량 유보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응기응변식 대응이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특히 일부 신문에 보도된 돼지사육무제한 허용과 대기업의 양돈업 신규참여 허용 보도가 "오보"로 확인은 됐으나, 물가당국인 경제기획원에서 고의로 언론에 흘린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축산법 시행규칙이 시행된지 4개월도 채 안돼 이를 검토했다는 자체만 봐도 정부의 단면을 보기에 충분하다.

돼지가격이 떨어질때 대량 비축을 하고, 값이 올라가면 방출을 통해 값을 안정시키면 얼마나 좋을까? 또 돼지가격이 떨어졌을때 수출 보조를 하지 않더라도 값이 오를 때는 수출시장 관리차원에서 정부의 최소한의 수출지원이 뒤따른다면 얼마나 좋을까?

최근과 같이 돼지가격이 오르는데에는 1년간 32%의 양돈농가가 도산할 수 밖에 없었던 양돈여건이 있었다는 것을 정부당국자는 잊어서는 안되겠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적할 점은 얼마전 축종별 직제에서 기능별 직제로 개편한 농림수산부 축산국 축산물유통과가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제시보다는 첫 사업으로 돼지고기 수입을 허용했다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작년 3월 4백93만2천두이던 돼지가 금년 3월엔 4백30만3천두로, 어미돼지는 77만1천두에서 59만4천두로 줄었고, 돼지가격은 9만9천원에서 금년 5월엔 17만 원선으로 상승했다. 또 돈육육가공제품은 작년(1~4월)에 비해 금년엔 44%의 소비증가를 보이고 있다.

아무튼 정부의 이번 조치가 약대가 천막속에 머리만 내밀고 들어왔다가 결국 천막속의 주인을 내쫓는 계기가 되어서는 결코 안되겠다.

〈취재 : 김동성〉